JEJU PEACE INSTITUTE
제주평화연구원

JPI 정책포럼

발행인 | 한태규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 Tel: 064)735-6500 · Fax: 064)735-6512 · www.jpi.or.kr

No. 2011-12 / 2011년 4월

대지진 이후의 일본 위상과 동북아질서

이면우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우선 예상할 수 있다. 또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경제적 향방 또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 · 중 양국 간의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한국의 입장에서 이 두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주도의 구도나 일중대립의 구도를 한국 단독으로나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 따라서 한국은 대북 전략을 포함한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청된다.

최근 한국이 위치한 동북아지역의 정세가 급속히 변화하는 조짐을 보인다. 김정은으로의 정권교체를 추구하는 북한은 남한을 대상으로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일으켜 한반도에 긴장상황을 조성했다. 2008년에 발생한 세계적 금융위기를 계기로 미국과 함께 G2를 형성한 중국은 일본과의 센카쿠열도를 둘러싼 분쟁에서 '희토류'의 수출금지라는 극단적 조치로 대응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은 사상초유의 대지진과 쓰나미에 휩싸여 그렇지 않아도 곤경에 처한 경제적 여건이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에 직면했다.

본고는 이러한 동북아지역의 정세와 관련하여 대지진 피해가 일본의 위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 그리고 그런 위상변화가 동북아 질서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일중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다.

목 차

1. 대지진의 피해상황 및 경제적 영향
가. 대지진의 피해상황
나.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2. 일본정치의 현황과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
3.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 일 · 중 관계를 중심으로
4.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대응

1. 대지진의 피해상황 및 경제적 영향

가. 대지진의 피해상황

○ 일본정부는 피해 규모가 최대 25조엔(3090억불)에 이를 것으로 예상
- 일본 경찰청은 4월 27일 현재 사망자가 총 14,508명, 행방불명자는 총 11,452명, 그리고 중경상자는 5,314명인 것으로 제시.[1] 또한 건물 피해의 경우 전체가 파괴된 것이 76,780호, 부분파괴가 26,856호였고, 도로파괴가 3,741개소인 것으로 발표.
- 후쿠시마시의 노동국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의해 반경 30km 이내의 사업소에서 일하는 약 5만8천명 근로자 대부분이 실업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을 제시.[2] 종업원 100명 이상의 사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장의 조업정지 등에 따른 영향으로 해서 휴업된 곳이 68개사 6046명이었고, 15개사의 24명이 대지진을 이유로 내정이 취소됨. 또한 공장의 조업정지가 장기화될 경우 실업 등과 같은 고용에의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이러한 피해규모에 따라 일본의 중앙은행인 일본은행(BOJ)은 일본경제가 2011년 가을에 들어서야 서서히 정상궤도에 안착할 것이라고 예상.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는 4월 22일 월스트리트저널(WSJ)과의 인터뷰에서 “대지진과 원전사태로 인해 상반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힘.[3]

○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3월 11일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일본경제가 입을 피해는 최소 16조엔에서 최대 25조엔(약 336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4]
- 동 보고서는 대지진에 의한 생산설비의 파손과 부품공급의 차질, 그리고 전력난 등으로 인하여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이 2011년에는 1.3%~1.5%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대지진에 의해 추가된 원자력발전소의 붕괴 및 그에 따른 방사능유출의 문제로 피해액의 추정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지적. 지진피해의 여파는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분석했는데, 이에 따라 지진피해가 일본의 성장 모멘텀을 약화시켜 복구를 위한 투자가 종료되는 2015년 이후 일본의 경제성장률은 1% 미만에 이를 것으로 예상.

○ 미의회조사국(CRS)이 4월에 발간한 「2011 일본 지진 및 쓰나미: 경제적 영향 및 미국에의 시사점」 보고서도 유사한 예상을 제시[5]

- 일본이 대지진 및 쓰나미로 인해 1,950억불에서 3,050억불에 이르는 경제적 피해를 입었고, 17,000명의 인명손실과 202,000채 이상의 주택 및 건물 파괴 등 집계.
- 이러한 피해에 따라 일본이 세계경제(GDP)의 8.7%를 차지하는 것을 고려하면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감소하고, 엔화의 상승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

나. 대지진 이후의 일본경제에 대한 두 가지 견해

○ 일본 및 일본경제의 미래에 대한 전망은 크게 낙관론과 비관론의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음.

○ 낙관론은 두 가지를 주장하는데, 하나는 이제까지 선진경제가 큰 재난으로 무너진 경우가 없다는 주장으로, 세계은행의 2009년 보고서는 지진 발생 3년 뒤에 선진국은 0.19% 포인트 성장하고 신흥국의 경우에는 0.1% 포인트의 GDP 증가율을 보였다는 조사를 제시한 바 있음.[6)]

○ 다른 하나는 "쇼크 독트린"으로, 대지진이라는 쇼크가 그동안 무기력에 빠졌던 일본경제를 일소하여 오히려 회생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는 주장임.

- 블룸버그의 윌리엄 페섹은 대지진이 "일본의 기업가 정신을 고취하고 경쟁을 증가시키는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고 전망.
- 국제적인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3월 22일의 발표에서 "일본경제가 2분기 잠시 위축되겠지만, 2012년에는 2.3% 성장할 것"이라고 밝힘.[7)]
- 하버드대 총장을 지낸 래리 서머스 교수나 워런 버핏 해서웨이 회장도 유사한 전망, 즉 "재해 복구 과정이 진행되면 역설적으로 국내총생산의 일시적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견해 제시.
- 다케모리 게이오대 교수는 좀 더 장기적인 차원에서 낙관적 예측을 제시.[8)] 대지진이 그동안 일본경제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였던 디플레이션 및 기업의 투자감소를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고, 이에 따른 경제의 선순환과정에 의해 일본경제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할 수 있다고 주장. 이와 관련해서는 원전사고에 의한 전력부족이 가장 큰 장애인데, 이를 위해서는 전후에 시행된 '경사생산방식'과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된다고 지적.

일본 대지진 및 쓰나미로 세계의 경제성장률이 0.5% 포인트 감소하고, 엔화의 상승으로 동아시아 국가들에도 추가적인 부담을 안길 것으로 예상돼

○ 이에 반해 경기부양의 조치가 일시적인 성장률 상승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일시적'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의미 없다는 주장도 제기됨.

- 캐롤라인 바움 블룸버그 칼럼니스트는 "재난 이후 경기부양에 사용되는 자원은 재난이 없었을 경우 다른 곳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자원이 낭비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고 주장.[9)]
-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레아 이코노미스트 역시 소비지출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많은데 이것이 "임금감소, 고용축소로 이어지며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망.[10)] 미쓰비시 UFJ 모간스탠리 증권의 시카노 다쓰시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대지진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

일본경제의 미래 전망은 일부 낙관론 불구하고 원전사고에 의한 전력부족이 가장 큰 장애로 이를 위해서는 전후에 시행된 '경사생산방식'과 같은 것을 추진할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요구돼

2. 일본정치의 현황과 일본경제의 회복 가능성

○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한 예상은 비관론보다는 낙관론이 우세한 듯하지만, 낙관론의 경우에 있어서도 단서조항이 많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그 중심에 정치리더십이 자리를 잡고 있음.

- 다케모리 게이오대 교수에 따르면, 대지진의 피해가 투자의 증대를 가져와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겠지만, 이에는 원전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 전력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함은 물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한 '경사생산방식'과 그것의 실행에 따른 갈등적 국면을 헤쳐나갈 수 있는 정치적 리더십이 긴요하다는 점을 제시.

○ 90년대 초에 발생한 버블경제의 붕괴 이후 일본은 지난 20여 년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는 극심한 저성장에 시달렸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요인들이 제시됨.

- 96년 전후에 나타난 경기회복 추세에 대해 성급히 긴축정책을 실행한 것이 요인이라는 정책실패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데 실패했다는 성장동력부재론, 고령화 현상이나 그와 상반된 소자화(저출산) 현상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등이 그것임.

○ 정치리더십의 부재는 이전부터 지적된 것이지만, 대지진 이후에는 특히 주요한 관건으로 제시됨.[11)] 이는 기본적으로 대지진사태에 대한 간나오토 현 수상의 대처를 비판하는 것이 주류를 이룸.

- 대지진 직후에 현장을 방문하여 오히려 사태수습에 지장을 초래한 것은 사태수습을 위한 체제 정비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자신이 처리하려는 부적절한 조치의 예로서 지적됨.
- 원전사태와 관련하여 '동경전력'에 일차적으로 수습의 책임을 떠넘긴 것 역시 사태파악의 안이함을 보여준 사례로 비판받음. 같은 맥락에서 사태수습을 위해 '담당대신'을 지정하는 정도에 그친 것도 '포스트주의(主義)'로서 비판받음.
- 대지진이라는 난국과 관련하여 간 수상이 제시한 '대연립' 구상 또한 표면적으로는 그럴 듯해 보였지만 난국을 해결하기 위한 진정한 노력이 아니라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비판받음.

○ 일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정치가 보다 관료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관료의 역할 또한 크게 나타나지 않음. 오히려 이번의 대지진 사태와 관련하여 일본의 '매뉴얼 사회적' 측면이 많이 지적되어 '관료적' 측면이 비판의 대상이 됨.

- 피해 현지에서는 석유부족이 심각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석유드럼통의 운반 및 보관이 법적 규제에 묶여 활용되지 못한 것이나 자위대의 긴급차량이 고속도로 요금소에 요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 등이 지적되었음.
- 또한 고속도로의 사용에 있어서 자위대의 긴급차량을 우선적으로 통과하게 만든 것이 지원물자를 실은 수많은 민간트럭의 운행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지역에 긴요한 물자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상황들이 연출되었다는 비판도 받음.
- 이번의 대지진 사태에 있어서는 소위 '상정외'라는 용어 및 개념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상정외'란 이번의 사태가 예상을 초월한 상황이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비판의 초점은 사상초유의 규모이며 사태인 것은 확실하지만 지진이 빈번한 일본에 있어서 예상한 범위가 너무 안이했고 그러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에 대한 비판인 셈임.

일본의 정책결정에 있어서는 정치가 보다 관료들의 영향력이 더 크다는 것이 통념인데, 이번 사태에 있어서는 관료의 역할 또한 크게 나타나지 않아… 오히려 일본의 '매뉴얼 사회적' 측면이 많이 지적돼

○ 현재 일본에서는 대지진과 같은 위기상황에 대처하는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것임. 이는 위에서 살펴본 대지진의 상황에서 간 수상의 퇴진과 관련해서 공방을 벌이는 일본 정치권의 모습에서 유추되는 부분이기도 함.

- 이것은 일본경제의 회복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예상을 가능하게 만

드는 것임.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본경제의 침체 또는 일본의 성장한계에는 많은 장애가 작용하지만, 이러한 장애 극복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치리더십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일본경제나 중국경제가 공히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과 중국에서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게 만들 가능성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을 넘어서 '대립적'인 측면으로 발전될 가능성 있어

3.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질서: 일 · 중 관계를 중심으로

○ 침체를 거듭하는 일본경제가 대지진에 의해 회복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을 검토했는데, 이러한 측면이 향후 동북아지역의 국제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일중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함.
- 동북아질서의 향방과 관련해서는 일중관계만이 아니라, 미국의 아시아정책이나 북한의 동향도 중요한 변수이지만 지면의 제약 및 논점의 집약을 위해 여기서는 일중관계의 향방에 초점을 맞춤.

○ 전후의 일중관계는 갈등양상이 점차 심화되는 과정을 밟아왔다고 할 수 있음.
- 전후 일중관계는 1970년대 초 국교정상화까지의 이념적 대립기, 그 후 천안문사태가 발생한 89년까지의 협력증진기, 그리고 이후 최근까지의 협력조정기의 세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음. 이러한 전개과정은 일중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임.
- 2010년에 발생한 센카쿠 분쟁은 갈등심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음. 센카쿠 분쟁의 핵심은 경제적인 측면임. 석유 및 천연가스의 매장가능성이 발표된 것이 1960년대 후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발전을 달성한 후 새로운 도약을 시도하려는 현 시점에서 센카쿠 분쟁이 본격화됐기 때문임.

○ 이것은 향후 일중관계에 있어서도 양국이 각기 직면할 경제상황이 양국관계의 성격 및 양상을 결정하는 주요한 요인이 될 것임을 시사함. 이에 따라 일중관계의 향방을 경제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즉 일본경제나 중국경제가 향후 침체할 것인지 아니면 성장할 것인지의 두 축을 중심으로 해서 네 가지의 가능성을 상정해 볼 수 있음.
- 첫 번째는 중국주도적 구도로서, 일본경제가 후퇴하는 가운데 중국경제는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경우임. 2010년에 이미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을 달성한 중국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면,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일본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국관계는

중국이 주도하는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은 불문가지임.

- 두 번째는 일·중 경쟁적 구도로서, 일본경제나 중국경제가 공히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는 경우임. 이제까지의 경우를 볼 때 중국은 경제적으로 견조할 때 좀 더 강한 자신의 목소리를 표출했는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일중관계는 '협력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 될 것으로 보임.
- 세 번째는 일·중 협력적 구도로서, 일본경제가 회복되어 8·90년대의 위상을 되찾는 반면에, 중국경제가 국내적 요인 등으로 후퇴하게 되는 경우임. 이 경우는 두 번째의 경우와는 반대로 중국의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에게는 중국위협 의식을 약화시키고, 중국에게는 유연한 대외자세를 취하게 만들어 '협력적'인 구도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
- 네 번째는 일·중 대립적 구도로서, 일본경제나 중국경제가 공히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임. 이 경우에 있어서는 경제적 어려움이 일본이나 중국에서 공히 민족주의적 정서를 자극하게 만들 가능성 때문에 '경쟁적'인 측면을 넘어서 '대립적'인 측면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음.

○ 현재의 일중관계 양상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볼 때 첫 번째의 중국주도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11년 3월에 발생한 대지진과 그에 따른 원전피해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일본을 볼 때, 일본경제의 회복에 따른 일·중 경쟁적 구도나 일·중 협력적 구도를 상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기 때문임.
- 최근 들어서 중국경제의 향후 발전가능성에 대해서 부정적인 예상이 제기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현재의 중국주도적 구도에서 일·중 대립적 구도로 발전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임.
- 중국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소득분배의 불균형이나 성장동력의 한계 등을 이유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도 상당 정도 제시됨.[12)]

현재의 일중관계 양상은 2010년에 일본을 제치고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볼 때 중국주도적 구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

4. 대지진 이후의 동북아 질서와 한국의 대응

한국의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중국주도적 구도나 일·중 대립적 구도를 한국 단독 또는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

○ 이상에서 2011년 3월 11일에 발생한 일본의 대지진이 동북아 지역질서에 미칠 영향을 일중관계를 중심으로 검토했음.
- 첫째, 일본의 경제적 회복이 불명확한 가운데 중국주도의 동북아질서가 당분간 이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게 함.
- 둘째, 성장동력의 한계라는 측면에서는 중국의 경제적 향방 역시 불투명하기 때문에 일중 양국 간의 갈등이 2010년의 센카쿠 분쟁의 경우에서 보듯이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함.

○ 한국의 입장에서 이러한 두 가지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음.
- 중국주도적 구도나 일·중 대립적 구도를 한국 단독 또는 한일협력만의 차원에서 다루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기 때문임.
- 물론 중국주도적 구도에 대비한다는 차원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원활히 하는 것이 중요함. 그러나 여전히 불투명한 측면이 많은 중국과의 관계에서 나타날 갈등의 측면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협력의 증진과 함께 한미관계의 증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이런 차원에서는 대북적인 측면만이 아닌 한국의 안보라는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국의 총체적인 외교안보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기획 및 감수: 진행남(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
편집: 고정선(제주평화연구원 연구원)
오은정(제주평화연구원 인턴)

저자 약력

▌이면우

現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음. 일본명치학원대학(2000) 및 미국오하이오주립대(2007) 방문교수 역임. 저서『현대일본외교의 변용과 한일협력』(2011),『포퓰리즘: 일본은 왜 고이즈미를 선택했는가』(2006) 등과 다수의 논문이 있음.

주석

1) 일본 경찰청 홍보자료, www.npa.go.jp/archive/keibi/biki/higaijokyo.pdf, 2011년 4월 27일 검색.
2) 요미우리신문, 2011년 3월 29일, www.jiji.com/jc.c?...
3) "일본은행 총재,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공식 인정," 조선일보, 2011년 4월 25일, news.chosun.com/svc/news/www/printContent.html?type, 4월27일 검색.
4) 삼성경제연구소,「동일본 대지진의 경제적 영향과 전망」, 조선일보, 2011년 3월 30일에서 재인용.
5) "일본 지진.쓰나미 파급영향 우려: 한중일 통상장관, 일본 지진 경제대책 논의," 석간 내일신문, 2011년 4월 21일, www.naeil.com/news/pop_viewnews_print.asp?sid=E&tid=3&nnum=602640, 4월27일 검색.
6) "일 대재난의 역설," 조선일보, 2011년 3월 23일, 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html?type, 4월 27일 검색.
7) "무디스 '일 경제 2분기 위축, 하반기 성장," biz.chosun.com/svc/news/printContent.html?type, 4월 27일 검색.
8) 竹森俊平, "新たなる戰後は日本經濟の前途を拓く," 中央公論, 2011年 5月号, pp.32-41.
9) "일 대재난의 역설," 조선일보, 2011년 3월 23일, p.2, 상게서.
10) "일경제지표도 쓰나미... 마이너스 성장 불가피," 상게서.
11) 橋本五郎, 後藤謙次, 長谷川幸洋, "座談會: 斷崖絶壁の日本人: 大地震が政治を問い質す,"『中央公論』, 2011년 5월, pp.60-69.
12) 예를 들어, 대니얼 앨트먼,『10년후 미래』, 고영태 옮김, (서울: 청림출판, 2011); 앨빈 토플러,『부의 미래』, 김중웅 옮김, (서울: 청림출판, 2006).

JPI 정책포럼 현황

○ **김병로** 『한반도 통일: 비전과 전략』 (2011년 4월)

○ **김동성** 『북한 정치경제 체제의 본질과 남북교류협력사업 방향』 (2011년 4월)

○ **김중섭** 『미중관계의 정상화와 대만』 (2011년 3월)

○ **고성준** 『새로운 통일 필요성 논리의 개발: 청소년 대상 통일교육과 관련하여』 (2011년 3월)

○ **이홍섭** 『러·중 군사협력의 동향과 장래』 (2011년 3월)

○ **김두진** 『동아시아 경제통합과 거대기업의 역할: EU사례의 함의와 적용』 (2011년 2월)

○ **염돈재** 『독일통일의 쟁점과 한반도 통일에의 시사점』 (2011년 2월)

○ **정영태** 『서해해상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방안』 (2011년 2월)

○ **김태환** 『21세기 신공공외교와 포럼외교』 (2011년 1월)

○ **안찬일** 『북한의 다각적 평화공세와 체제전환 가능성』 (2011년 1월)

○ **황지환** 『남북관계의 국제정치』 (2011년 1월)

○ **성원용** 『러시아 극동지역의 전력공급체계와 남-북-러 전력계통 연계』 (2010년 12월)

○ **고상두** 『동북아 다자협력체 구축조건: 통일독일의 경험이 주는 함의』 (2010년 12월)

○ **김갑식** 『북한 당대표자회와 김정은 후계체제 전망』 (2010년 12월)

○ **박홍영** 『전후 일본 ODA 정책의 변화상: 한국에 주는 함의』 (2010년 11월)

○ **최희식** 『중일 첨각열도 해양영토분쟁: 평화적 관리 방식의 전환기?』 (2010년 11월)

○ **김미경** 『일본의 반핵평화주의와 안보현실』 (2010년 11월)

○ **김수암** 『탈북자의 현황 및 인권』 (2010년 10월)

○ **원동욱** 『중국 대외원조의 현황과 추세: '불량국가' 지원과 그 시사점』 (2010년 10월)

○ **손기웅**『독일통일 20주년에 비춰본 한반도통일의 과제와 전망』(2010년 9월)

○ **이선진**『중국의 대미얀마 전략』(2010년 9월)

○ **최경수**『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의 변화 전망』(2010년 9월)

○ **전진호**『일본의 한국병합 100년 한일관계의 과제와 전망: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한일갈등의 해결방안과 협력의 전망』(2010년 8월)

○ **정성장**『북한의 파워 엘리트 변동: 동향과 전망』(2010년 8월)

○ **최명해**『중국의 대북 정책: 변화와 지속』(2010년 8월)

○ **김재철**『중국과 동아시아 지역협력』(2010년 7월)

○ **이성우**『두만강 개발과 동아시아 다자협력의 전망: 동아시아 다자협력체의 건설을 중심으로』(2010년 7월)

○ **이애란**『북한이탈주민 여성의 사회정착 현황과 조기정착 방안』(2010년 7월)

○ **안병민**『남북해운합의서상 통항 통제조치의 효과 및 전망』(2010년 6월)

○ **서상문**『한국전쟁의 국제정치적 의의와 현재적 함의』(2010년 6월)

○ **손병권**『오바마 행정부 등장 이후 미중관계의 전개양상과 전망』(2010년 6월)

○ **권태진**『북한의 식량위기: 배경 및 전망』(2010년 5월)

○ **오경택**『오바마 정부의 기후변화 정책 평가 및 전망』(2010년 5월)

○ **김기석**『신 공동체 구상과 신아시아 외교』(2010년 5월)

○ **전성훈**『핵비확산 체제와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한 함의』(2010년 4월)

○ **김석수**『해적과 해양안보: 소말리아 해적 문제를 중심으로』(2010년 4월)

○ **유달승**『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2010년 4월)

○ **조동호**『통일비용 논의의 바람직한 접근』(2010년 3월)

○ **이영훈**『북한 경제난의 현황 및 전망』(2010년 3월)

○ **이선진**『동남아에 대한 중국 전략: 현황과 대응』(2010년 3월)

○ **문흥호**『마잉주 정부 출범 이후 양안관계의 변화와 지속』(2010년 2월)

○ **조성렬**『한반도평화협정 논의의 재등장 배경과 향후 전망』(2010년 2월)

○ **이종서**『EU의 대북정책의 특징: 규범적 권력 vs. 전략적 이익추구』(2010년 1월)

○ **박병광**『최근의 중국 군사력 발전 현황과 함의』(2010년 1월)

○ **송화섭**『일본의 군사전략과 군사력 증강 추세』(2010년 1월)

○ **고주현**『ARTE TV 정책형성 과정과 한중일 공동채널의 가능성 모색』(2009년 12월)

○ **김강일**『중국의 동북아전략과 대한반도정책』(2009년 12월)

○ **윤이숙**『한중일 환경산업기술발전과 정부의 역할』(2009년 12월)

○ **김영희**『독일통일이 한국에 주는 교훈』(2009년 12월)

○ **박원화**『항공 안전: 국제 및 국내법적 대처』(2009년 12월)

○ **고봉준**『동북아의 '조용한' 군비경쟁과 북핵(미사일) 실험』(2009년 12월)

○ **조윤영**『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외교정책과 대북정책』(2009년 12월)

○ **최장근**『일본 민주당의 독도정책에 관한 분석』(2009년 12월)

Jeju Forum
for Peace & Prosperity

Community Building in East Asia

www.jejuforum.or.kr

제주평화연구원은

2011년 5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해비치 호텔 & 리조트, 제주에서 '제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을 주관하였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새로운 아시아 :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New Asia for Peace and Prosperity)' 라는 대주제 아래 평화와 안보, 경제, 경영, 환경, 문화, 여성, 의료, 도시디자인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의제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새로운 국제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아시아 지역내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은 김황식 국무총리, 아로요 필리핀 전대통령, 자오치정 중국 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위원장 등 국내외 고위인사 등이 참석하여 새로운 아시아 지역협력의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여 주었고, 64개 세션에 세계 22개국에서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포럼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켰으며 중국 중견기업인 100여명을 포함, 국내외저명인사 1,8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규모면에서도 가장 큰 회의로서 종합국제포럼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성대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제6회 제주포럼 개회식에서 공식화된 바와 같이 이제 제주포럼은 격년제 개최에서 매년 개최하기로 되었으며, 이에 따라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포럼 기획단을 발족하여 2012년 5월–6월 중 제7회 제주포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앞으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종합국제포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7회 제주포럼 부터는 포럼의 의제와 목적에 동의하는 국내외 기관과 단체가 세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세션을 대폭 개방할 예정입니다. **제7회 제주포럼에 대해 귀기관과 귀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합니다.**

제주포럼에 대해서는 포럼 공식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포럼 참가문의는 제주포럼 기획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포럼 기획단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관광로 227–24, 제주평화연구원 (697–120)
Tel. 064-735-6532 또는 533 email. jejuforum@jpi.or.kr
homepage. www.jejuforum.or.kr

2011년 8월
제주평화연구원 제주포럼 기획단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